

社 說

백년지대계의 교육이 절실하다 - 다시 돌아온 입시전쟁을 보며

바야흐로 92학년도 입시전쟁이 시작되었다. 각 대학별로 오는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12월17일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모습을 다시 보게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열성 어머니들이나 하는 백일기도등이 이제는 보편화되었고 각 입자나 방송에서의 반응도 보도가 확대된 것으로 보아 입시전쟁은 가일층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다.

대학입시가 입시전쟁이라고 불릴만큼 치열해진 이면에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사회적인 인식과 형태들이 대학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꼭 합격해야 하는 당위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인생의 낙오자로 낙인찍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격하려는 수험생 및 부모들의 모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부분만이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동등한 자격으로 실력을 겨루는 유일한 장이라는 데에도 입시전쟁을 가열시키는 한 요인이 있다.

이것은 사회에서 대학을 신분계승상승의 한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가진 자들은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교육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사회상부계층에서 성행하고 있는 과외비가 교육비 1년예산의 절반이 넘는 2조원을 상회

한다는 사실은 갈수록 부패해가는 교육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 대학들이 부정입학이라는 흑막을 치루었으며 학문 연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본연의 임무가 아닌 학점 위주의 공부만을 하는, 직장을 구하는데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육부에서는 국가교육 전체의 기층적인 변화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9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개정 시안을 발표하는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나 거대한 바다에서 표류하는 뗏목같이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국가전체를 떠들썩하게 하는 입시전쟁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첨예한 경쟁을 통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분 상승의 도구로서, 직업을 구하는 한 수단으로밖에 역할을 못하는 대학의 현실과 이러한 역할을 규정하는 사회의 구조로서는 가열화되는 입시전쟁을 피할 길이 없다.

교육이 한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대학을 진정한 학문연구의 장으로서가 아닌 직업양성소로 전락해 버리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조속히 바뀌기를 바라며 현재도 대학의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부추기는 교육제도가 아닌 인생을 설계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철저한 반성과 내년 위한 자기연마 - 91년 한해를 마감하며

올해 마지막 시험인 2학기 학기말고사가 오는 28일부터 실시된다. 학기말 고사를 끝으로 동계 방학에 들어가는 것을 떠나 1년 동안의 일을 다시금 되돌아 볼 때인 것이다.

학기초 등록금 인상 협상으로 시작되었던 투쟁정국은 4월말 故 김영삼대 사임이후 계속되는 투쟁입장속에 탈대중적으로 매몰된 점이 있었다. 또 6월 3일 외대사건으로 학생운동정신이 패륜아로 돌리는 등 혼란을 겪으면서 위축된 감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학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과 대학내에서도 자성의 기운이 높아 지진 했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소련구대타와 일련의 국제정세변화에 기인한 내부의 변화가 아닌 것이다.

한편 2학기 들어서는 일부 대학들의 부정입시 사건으로 대학의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하였으며, 8년만에 풀린 입학정원조정조치와 함께 대학평가기준제를 시행하였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대학가에 기대와 우려의 반응을 나타내게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건들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총리 사임 이후 정부가 학원안정화대책의 발표와 함께 계속 학생운동정신을 규제 탄압하고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학내 학생들의 분위기가 갈수록 활짝화 되어가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내년도 입시전 열에 있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정후가 적정스럽게 도 해였다.

사회에서는 유괴살인사건, 마약등 작년부터 시행된 범죄외의 전방선포를 비롯하여도 학내 범죄의 유형들은 더욱 잔인해졌으며 폭행·강간등 사회범죄 현상은 그 어느때보다도 극심해졌던 한 해였다.

사실 이러한 정후들이 유달리 적정스러운 것

은 다가오는 92년이 어쩌면 우리 역사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내년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중요 선거가 4차례나 있으며, 내년의 정세 구도가 향후 또 몇년의 우리나라 역사의 방향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91년도 한달 남짓 남았다. 우리는 이 한 달의 기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으며 저물어가는 91년의 사건들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밝아오는 92년의 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귀중한 시간인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사이에선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을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쉬운 것, 걱정이 없는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다.

단편적이고 단순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의 계획을 쉽게 수립하는 것을 뛰어넘어 뼈를 깎는 고뇌와 고민속에서 창출되는 반성과 목표들은 더욱 값진 것들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앞에서 밝혔듯이 내년은 향후 정치정세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 생각되어진다.

민족민주진영에서는 내년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대격투기로 규정, 삼성연합체제의등 현재 자기역량을 모으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사태를 살피는 대학의 구성원은 이러한 상황에 최선의 역사적 실존적 행위의 책임이 있음을 자명할 일이다. 그러므로 결코 수동적이지 아닌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험난한 시류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방학을 맞이하며 지나간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기 담금질을 준비할 때이다. 강철은 두드려질수록 단단해진다.

인권현실 왜곡된 껌데기 보고서

- 6공의 인권실태와 정부인권보고서의 허구성



인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에 관한 기본권리'라고 이야기한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질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가장 필요한 권리인 셈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인권의 개념도 최소한의 권리에서 최대한 권리로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유권 이외에도 노동권, 환경보전권등도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을 보면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률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5공화국 시절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것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억압을 받았다. 특별히 예를 들지 않더라도 5공시절 잔인했던 고문치사와 성고문 사건은 인권유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현 6공화국 들어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가 이룩된 결과로 인권침해 따위는 있을 수 없고 더구나 '정체법' '양심수' 등은 존재할 수 없고, 있지도 않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기실 우리의 인권상황은 그리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다.

아직도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하는 악법들이 실재하고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관료 기구들이 남아서 국민적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특히 거리에서의 캠페인 또는 서명운동 등을 도로교통법으로 막는 것이라는지 순수 학술단체라 할 수 있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다.

한편, 정부가 최근 UN에 제출한 '인권보고서'가 얼마만큼 우리의 인권실태를 나타냈는가에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0년 4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가입했다.

그리고 가입 1년내에 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서인 인권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 조항에 따라 지난 7월에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따른 최

견을 가집수 있는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경우 반국가단체의 구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찬양·교무·동조와 회화에 대한 죄가 추상적이고 법적용이 자의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행동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도 불분명할 뿐더러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일반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나 입장표명마저도 찬양·동조 혐의로 범죄시 한다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집

있으며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예상될때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행과정을 살펴보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의 경우 허용해 주지 않았고 원천봉쇄하기가 대다수였다. 실질적으로는 집회는 정부에 의한 허가제가 된 셈이다.

이외에도 노동법중 '제3자 개입금지' 조항도 B조약9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내법 조항자체가 국제인권규약에 맞지 않으며 그 집행과정 속에서 법조항과는 상관없이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인권상황은 아직 양호하게 보이지 않는다.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우리의 인권상황이 열악하게 평가받던 것과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해 청원해 오는 것들은 부끄러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국민들 사이에 인권에 대한 의식의 고요함으로 많은 인권신장이 있어 왔지만 아직 갈길은 먼 것 같다.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첫째, 제도개혁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견제할 제 약법들의 철폐와 올바른 법의 집행들이 우선되어야 법적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인권에 대한 권리의식이다. 권리의식 이아말로 인권을 신장시키는 가장 밑거름 인 것이다. 인권이 하늘에서 떨어 진 선물이나 역사속에서 오랜 투쟁을 거쳐 이뤄낸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송보영 기자)

집시·보안법 자의적 적용이 구속자 양산 권리의식·악법개혁이 인권신장의 지름길

인권침해사태의 좋은 본보기이다.

또한, 고문에 대한 시비도 아직 그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의 임의의 동행, 감금수사 등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정치범과 양심수가 없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현재 일천여명의 시국사범이 갇혀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발표에 따르면 91년11월10일 현재 1천1백36명의 양심수가 수감돼 있으며, 이것은 87년도 8월 7백60명을 훨씬초도는 수이다.

또한, 그 1천1백36명의 구속사유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화염병처벌법, 집시법등의 준이며 구속처벌도 화염, 노동자, 장기수, 재야인사, 군경수이다. 이는 단적으로 5공때보다 6공에서 인권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말해주는 것이

초보고서(이하 인권보고서)를 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국제인권규약에 연관되는 국내법을 조목조목 잘 정리해 놓긴 했지만 그 내용이 실제 우리의 인권현실과는 거리가 먼 당위적이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B규약18조, 19조를 보면 사상, 양심의 자유와 의

회·결사의 자유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B조약21조에도 우리 집시법은 크게 어긋나고 있다.

지난 1989년에 개정된 집시법은 48시간 이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 제 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대한 보도



北 핵위기사설 동조 미 패권주의의 정당화

'진정 이 땅의 비핵군축, 자주적 평화통일은 이처럼 요원한 것인가'

지난 20, 21일 양일간 열린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이 같은 의구심으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전시집수국지원법'이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는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북의 핵개발에 대한 한미의 공동대응책 마련'과 '전시집수국 지원법 철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대한 언론의 보도양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개의 제도권 일간지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한미 양국이 더욱 탄탄한 군사적 우방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동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북한 핵개발을 큰 이슈로 등장시킴으로써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고 남한내의 장기주둔을 정당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라는 분석이다.

연례안보협의회의에 앞서 지난 19일,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를 사설을 통해 각각 핵과 안보문제에 관해서 '남북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논의방향을 기대한다' '무기체계의 변경·첨

단무기의 자체생산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자'고 연례안보협의회의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신문은 '북한핵·동북아 안보 최대의 뇌관'이라는 기사를 대서특필함으로써 연례안보협의회의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회의가 시작된 20일부터는 모든 일간지의 기사면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로 장식되었다. '북한 핵 대응 중요 새질서속의 한미 안보협력' '유익(서울 20일 사설)', '북한핵개발에 대가 검토' (조선 20일), '북한 핵사찰 거부명령 제가 초점' (한국 21일) 등의 보도가 22일에는 '주한 미군 추가 철수 유보' 발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일간지들은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연례안보협의회의에 대한 사건보도만 흘러며, 북한의 핵개발을 위협천만만 일인만큼 한미의 강경대응은 당연하다는 논평으로 일관했다. 유일하게 한겨레신문만이 21일 사설과 22일 기사를 통해 '북한 핵'이라는 다분히 가상적인 위협을 명분으로 한 미군의 장기주둔 속셈'이라고 분석하며 미국의 한반도 장악요금을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의 핵이 지난 61년부터 남한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지금, 북한 핵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시집수국지원법정를 체결시키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 선제공격의 여지까지 보이고 있는 미국과 정부의 행위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언론이 자기의 본분을 찾아 미국의 패권주의와 정부의 대북한 안보정책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다.

(이금주 기자)

POSCO 메세지 ⑧ 종강편



나의 책걸이는 언제?

옛 서당의 큰 잔치, 책 한권을 다 배울 때마다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떡을 만들어 먹으며 배움의 한 단계를 결정짓던 행사 — 책걸이 정해진 시간없이 한권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만 할 수 있었던 책걸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개강 후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벌써 한 학기 종강 — 책걸이의 종강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의 종강은 아깝니까? 책 한권이 주고자 하는 학문적인 의미로 받아 들였는지? 학점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훑어보지는 않았는지? 진정한 책걸이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떡과 함께하던 책걸이가 막걸리 풍파타로 변했더라도 진정한 책걸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예전의 '책걸이 떡'을 먹을 수 있는지를...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